새로운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 가능성

2025 년 정책 전문가 네트워크 프로그램 (주최: 게이오기주쿠대학 한반도연구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 참가자들은 2025 년 12 월 서울을 방문하여 한국 정부 관계자, 국제정치 및 한일 관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오늘날까지의 한일 양국 협력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협력 분야에 대하여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2025 년 2 월 도쿄에서 열린 후속 회의에서 방한 프로그램에서 얻은 식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정리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린다.

트럼프 2 기 행정부 하에서의 한일 협력

트럼프 제 2 기 행정부 출범 이후 1 년이 지났다. 지난 1 년 동안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은 관세 협상과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 왔다. 한국과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 다카이치 정권은 안보 3 문서 개정과 방위비 증액을 동반한 방위력 강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2026 년 1 월 말에 한국을 방문한 콜비 미국 국방 차관이 한국을 ‘모범적인 동맹국’ 이라 칭한 점은 미국이 대북 대응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전보장에 있어 한국이 수행할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예측 불가능한 의사결정 방식을 고려하면 미국의 인태 지역에 대한 공약이 향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체를 동반할 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 특히 2026 년 봄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중국과 어떤 ‘거래(딜)’이 체결될지, 동맹국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현재의 한일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구체적인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한미일 3 국 협력의 모멘텀 유지라는 관점에서도 한일이 보조를 맞춰 ‘모범적인 동맹국’ 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곧 미국의 인태 지역에 대한 관여를 유지하는 데 개연성을 부여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방위 산업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매우 유망하다. 2026 년 1 월 30 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제시된 인공지능(이하, AI), 무인 시스템, 우주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모색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실현에는 많은 장벽이 예상되지만, 예를 들어, 한일 양국이 직면한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군사 분야 인력 부족을 메울 수 있는 AI 기반 공동 방위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한일 방위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틀을 양국 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국간으로 확대시킬 수도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에 대한 헤징으로서 다각화 전략을 가속화하는 인도와의 협력은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2026 년 1 월 일본-인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경제 안보 및 AI 분야 협력 심화는 앞서 언급한 한일 논의와 부합한다. 한국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 외교' 측면에서도 인도와의 첨단 기술 협력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 트럼프 제 2 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각국이 위험 분산을 모색하는 가운데, 한일은 양국 관계의 심화를 기축으로 삼으면서도, 인도 등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이해관계 공유국을 끌어들인 새로운 협력 체계를 주도해야 한다.

중국 및 인도 태평양을 둘러싼 한일 협력

미중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은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는 물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협력하여 대응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에게 중국은 이웃 국가이며, 주지하듯이 역사, 문화, 경제,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동북아시아와 인도 태평양, 나아가 국제 질서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도 한중일 3 국의 협력은 중요하다.

한편, 중국이 한일 양국에 취해온 강경 발언을 간과할 수는 없다. 2016 년 한미 양국이 THAAD(고고도 지역 방위) 시스템을 주한 미군에 배치하기로 합의한 뒤, 중국은 한국에 사실상의 경제 제재를 가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 내 대중 감정이 크게 악화했을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가 불안정해졌다. 그리고 2025 년 11 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관련 국회 답변을 계기로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유사한 대응을 취함으로써 중일 관계도 악화된 상황이다.

중국이 '경제적 위압'이라 할 수 있는 수단을 한일에 이미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양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틀을 만드는 것이 그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빅터 D. 차 등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본을 포함한 G7 과 인도 태평양 2 개국(한국과 호주) 간의 틀을 새로 만들고, 만약 중국이 이 국가에 경제적 위압을 가할 경우 집단적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도 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은 중국이 경제적 상호 의존을 무기로 삼는 오늘날의 현실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양국의 주도를 통해 중국의 위압에 맞서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일 양국은 인도 태평양 국제정치 환경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에 기반한 협력을 더욱 심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호주, 영국, 미국의 AUKUS 를 참고한 한미일의 JAKUS 등과 같은 틀을 마련하고 여기에 미국을 초청하는 정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전략 대화(QUAD)에 한국이 QUAD+1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과 더불어, AUKUS 에 한일 각각이 아닌 양국이 동시에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더욱이 2024 년 11 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의 첫 국방 회담이 개최된 점을 고려하면, 한미일과 호주, 필리핀 등과 같이 미국의 동맹망을 기반으로 한 소그룹 협력도 가능하다.

한일 양국은 호주, 필리핀, 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동맹국 중 하나이며, 최근 몇 년간 이들 국가 간 외교 및 방위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 또한, 한일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및 그 회원국, 나아가 인도,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의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비록 역외에 위치하였으나 유럽연합(EU)과 그 회원국, 그리고 영국과도 한일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인태에 관여하는 유사 입장국과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를 들어 한일+α(한일-호주, 한일-인도, 한일-호주, 인도)와 같은 형태로 소그룹 연대를 더욱 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위정보 문제 대책을 둘러싼 한일 협력

이어서 한일 협력의 과제로서 비전통적 안보 분야인 허위정보 문제에서의 공동 대응을 들 수 있다. 지난 10 년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외국의 허위정보 확산과 정보 조작이 선거나 여론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퍼졌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왔다. 그 배경에는 SNS 보급에 따른 정보 유통 구조의 변화에 더해, 최근에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허위정보의 정밀도와 확산, 증폭되는 속도, 복잡성 등이 크게 증대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 언어 장벽이나 문제 인식 차이 등의 요인 때문에 외국에 의한 허위정보 확산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서구에 비해 반드시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다만, 이러한 상황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변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ALSP 처리수의 해양 방출을 둘러싸고 중국에서 전개된 정보전 사례 등을 교훈 삼아, 정부 주도로 허위정보 대책을 강화해왔다. G7 신속 대응 메커니즘(G7 Rapid Response Mechanism)을 비롯한 국제 협력 체계, 그리고 2022 년 12 월에 각의 결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허위정보 문제는 그 확산 주체를 외국 세력으로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본의 허위정보 대책은 주로 대외적인 정보 조작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국내 정보 환경이나 사회적 양극화 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제한되어왔다.

한편, 한국에서도 허위정보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일본과는 다른 맥락에서 인식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보 생태계의 변화와 함께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서적 양극화'가 사회 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SNS 나 YouTube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정치적 의견 표출이 급증하고, 특정 인플루언서나 극우 계열 유튜버가 정보를 확산시키는 사례도 다수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 유권자의 투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분열된 정보 환경이 허위정보의 수용과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시민들의 기존 미디어로부터의 이탈과 SNS 의존도 상승에 더해, 여야 간 정보전으로 대표되는 사실 인식이나 정통성을 둘러싼 정치적 분열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서 한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정보통신망법(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개정안 (소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2025 년 12 월 24 일 국회에서 가결되어, 2026 년 7 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허위정보를 유포한 미디어 관계자나 유튜버 등에 대해 형사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2025 년 4 월에 '정보 플랫폼 대처법' 이 시행되었으나, 해당 법은 온라인 상의 악성 댓글이나 이익 침해 등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허위정보 그 자체나 외국에 의한 정보 조작을 직접 규제하기 위한 틀은 아니다. 나아가 일본에서 허위정보를 직접 규제하는 법 정비는 표현의 자유 문제도 얽혀 있어 정책적,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기 쉽다. 이 지점에서 한일 간의 제도적 접근 차이가 나타난다.

나아가 한일이 허위정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저해 요인 중 하나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영향이다. 한미 간에는 외국의 정보 조작에 대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양국 간 양해각서(2023 년 12 월 서명)가 이미 있고, 2024 년 3 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 3 회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허위정보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하지만 트럼프 제 2 기 행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허위정보 대책 폐지로 인해, 이러한 국제 공조는 사실상 기능 부전에 빠졌다. 최근에는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한국 국내의 움직임에 대해 미 국무부가 검열이나 언론의 자유, 한미 간 기술 협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태도를 공개적으로 보인 바 있다. 한국에서 2026 년 7 월에 개정안이 시행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콘텐츠 규제가 강화된다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비판, 이에 따른 한미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허위정보 대처를 둘러싼 국제 협력이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한일을 포함한 지역 협력 전체에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주도해 온 허위정보 대책의 국제 공조가 약해지는 가운데,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정보 무결성(Integrity)을 둘러싼 노력은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 호주, 대만, 필리핀 등의 지역 행위자가 주체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정권 하에서 인텔리전스 개혁을 중심으로 외국의 허위정보 확산에 대한 대책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언어 장벽 등의 문제로 심각한 허위정보 과제에 대응한 경험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허위정보 대처에 관한 경험이나 인식을 지역 행위자 간에 공유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허위정보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적 접근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근접성이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심적 행위자로서의 지위 등을 감안하면 협력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협력은 역사 인식 등 양국 간 분열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쟁점이 향후 허위정보 캠페인이나 내러티브 조작에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양국 관계를 불필요하게 훼손하는 사태를 회피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의 의의도 있다. 따라서 양국은 정부 간 협력에 머물지 않고 연구자, 기술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 간의 네트워킹이나 사례 공유, 공동 연구, 시민 기술(Civic Tech) 활용 등의 노력을 꾸준히 쌓아갈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

2025년 11월, 도쿄에서 제14회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가 개최되어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양국 정부 간의 과학기술 분야 정책 대화가 재개되었다. 해당 대화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지 못했던 배경으로서, 역사 인식 문제나 수출 규제 강화에 따른 정치적, 외교적 마찰이 주요 이유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구조적인 요인으로서, '미국을 포함한 다자간 및 3 국간의 틀이 사실상의 대체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점, 또한 한일이 해당 분야의 잠재적인 경쟁 상대이면서도 상호의 전문 분야에서는 상대국보다 충분히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 협력의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특히 오늘날의 첨단 기술은 경제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기술 표준 제정이나 핵심・신흥 기술(CET)의 연구 개발 전략, 수출 관리 정책의 조율은 미국을 허브로 하는 동맹국 간의 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격화나 글로벌 공급망의 분단 리스크가 상시화 되는 가운데,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적인 전략적 이익(CHIPS 법 등에서 보여지는 국내 회귀 정책)이 한일의 산업적 이익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국면도 상정할 수 있다. 또한 기술 개발의 관점에서도 좁은 의미의 경제 안보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표면화되는 가운데, 양자 협력을 포함한 보다 유연한 협력 체제 구축의 의의가 커지고 있다. 일부 신흥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은 규모 면에서는 후발 주자인 미들 파워이며, '틈새의 유력한' 포지션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도 공통되며, 전통적 분야의 상호 기술력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좁혀졌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다자 틀을 보완하고, 한일 고유의 산업적 보완성과 사회적 맥락에 기반한 직접적인 양자 협력 메커니즘을 재구축하는 합리성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몇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시사된 바 있다.

첫 번째는 차세대 반도체 및 AI 기반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의 상호 보완이다. 지금까지 양국은 민간 기업 간의 상거래를 중심으로 연계를 도모해왔으나, AI 용 반도체 개발에서 고도의 패키징 기술이나 신소재 개발이 요구되는 현재, 설계 단계부터 기술적 연계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 맞춰 외교・기술 당국 간에 처음으로 '제 1 회 한일 AI 실무협의'가 개최된 사실이 보여주듯, 비영어권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양국이 자국의 문화적 배경에 적합한 자율적인 AI 거버넌스나 저작권 보호 규칙 형성에 있어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일본은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이노베이션과 적절한 (넓은 의미의)매니지먼트를 양립시키는 AI 거버넌스를 추구해왔다.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는 G7 에서 시작된 이니셔티브지만 일본은 프렌즈 그룹 등을 통해 이를 진정한 '세계적인' 틀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지정학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된 이 중요한 신흥 분야에서,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가 제시하는 지침으로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두 번째로 우주 항공 분야 내 비경쟁 영역에서의 협력이다. 2024 년 5 월, 한국이 우주항공청(KASA)을 신설하고 우주 산업 육성 체제를 본격화함에 따라,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도 명확한 실무적 카운터 파트 관계가 구축되었다. 기후 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지구 관측 위성 데이터의 공유나 우주 쓰레기 대책과 같은 영역에서의 협력체제의 경우 현황 파악의 수준을 넘어, 향후의 기술·자원 관련 경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및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서의 연계이다. 한일 양국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노동력 보충과 지속 가능한 의료 제도의 유지는 공통의 국가적 과제이다. 또한 합성 생물학 등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는 가운데, 기술 경쟁은 단순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데이터의 통합과 연계에 기반한 새로운 협력 관계의 진전도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이는 지식재산권이나 데이터 관리 등에 있어서 적절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면 양국이 협력체제 하에서 각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 밖에도 양국 모두 수입 의존과 지형적 제약을 공유하면서도 구조 전환을 내다보고 있는 에너지 분야나 양자 컴퓨팅, 축전지 분야 등 폭넓은 영역에서 협력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산업상 경쟁 관계에 있어 폭넓은 정보 공유를 전제로 한 연계뿐만 아니라, 보완 관계나 기업 간 연계의 중개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매니지먼트 설계를 통한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 기대된다.

신흥 기술 분야는 협의의 기술적 과제를 넘어, 더욱 폭넓은 지정학적 함의를 갖는 시대를 맞이했다. 또한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는 기술과 정치 정세 양쪽 모두를 고려한 양자 협력 등, 더욱 유연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 만큼 한일 간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체제 구축이,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체제로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기술 관련 분야는 정치적인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접점 확보와 대화의 지속이 중요한 분야이며, 행정 분야 및 관계자를 포함한 '1.5 트랙 대화'의 지속과 같이 어느 정도 제도화된 틀을 더욱 강화되는 것도 유효한 방안일 수 있다.

문화외교를 둘러싼 한일 협력

한일 양국은 각자 대외적인 소프트파워의 도구로서 문화를 이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문화에 대한 투자 방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문화 관련 예산은 정부 일반회계 전체의 0.01% 수준에서 정체된 반면, 한국 정부는 K-팝이나 K-드라마 등의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 문화 예산을 대폭 계속 확대하고 있다. 문화 예산 안에는 물론 문화유산에 대한 투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 정부는 타국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일본의 대외 지원은 예산 문제로 인해 그리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화에 관한 투자, 특히 문화유산을 둘러싼 국제 지원이나 프로젝트 실시를 위해 한일 정부가 공동으로 나섬으로써 국제사회에 더 큰 기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본은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문화유산 보전 관리에 관한 제도 설계나 이념 형성에 있어 오랫동안 리더십을 발휘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재해 방지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기여를 해왔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교토 등을 거점으로 문화유산의 재해 방지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고, 또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국제 연수 실시를 통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현재 한국은 문화유산의 해석(interpretation)을 둘러싼 국제 체제 형성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를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문화유산을 둘러싼 다양한 테마에서 한일이 각자의 리더십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영역 횡단적으로 양국이 공동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동아시아에서 국제사회로 기여할 수 있다면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등 각 지역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유산 관련 네트워크가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동아시아는 현재 각국이 독자 노선을 취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나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많은 것을 공유하는 한일이기에, 문화 분야 중에서도 특히 문화유산 영역에서 협력한다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나아가 다른 지역에서도 동아시아에서 배양해 온 식견을 통해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